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이산가족 고령화 추이와 과제
- 70대 이상 고령층이 82%

발행인 : 강인수
편집주간 : 김동열
편집위원 : 주원, 이부형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이산가족 고령화 추이와 과제
 - 70대 이상 고령층이 82%

Executive Summary	i
1.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	1
2. 이산가족 상봉 현황과 시급성	2
3.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8

< 요약 >

■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와 현황

(개요) 이산가족 상봉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남북한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북한은 '8.25 고위급 합의' 제5항에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와 정례화 여부는 '8.25 고위급 합의'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단계 실천적 조치로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폭을 예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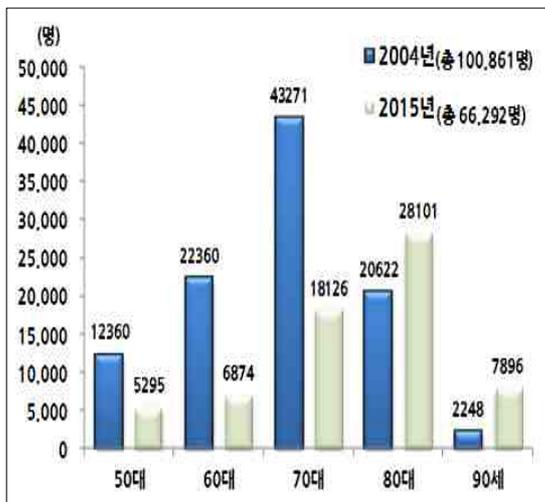
(추이) 2000년 남북정상선언에서 방문단의 상호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활성화되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과 민간 차원의 상봉이 모두 급감하였다.

■ 이산가족 상봉 확대의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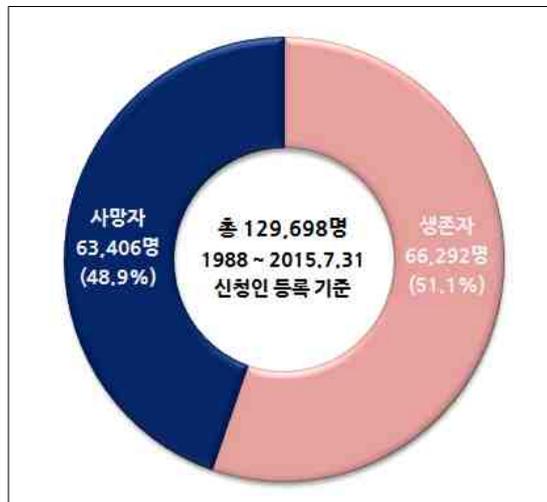
(고령층 급속 증가) 현재 이산가족의 연령 분포의 특성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 중 전체가 5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1.9세로,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의 평균 기대수명 초과자는 2004년 20,622명(전체 20.4%)에서 2015년 현재 35,997명(54.3%)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고령자들이 생애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사망자 급증) 1988년 이후 2015년 7월말까지 등록된 상봉 신청자는 총 12만 9,698명으로, 이중 48.9%인 6만 3,406명은 사망했고, 51.1%인 6만 6,292명만 생존해있다. 2004년 이후 사망률과 상봉률의 격차 확대로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약 3,800명에 달한 반면 상봉자 수는 1,420명에 불과해, 연간 2,38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특히 2008년에서 2014년까지 7년간 이산가족 상봉률은 1.7%p 증가한 반면, 사망률은 20.1%p나 대폭 증가했다.

< 이산가족 생존자의 고령화 추이 >



< 이산가족 등록자 현황 >



(고령자의 기대여명 소진) 현재의 이산가족은 평균 기대여명(50~60대 24.9년, 70~80대 9.9년)으로 보아 **25년 내 거의 사망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의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현재의 모든 생존자들이 향후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봉인원을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매년 5,5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생존자 비율이 5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2014년 상봉 규모인 813명씩 상봉할 경우, 연평균 3,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할 것으로 우려된다.

< 평균 기대수명을 초과한 이산가족 현황(2015년 현재) >

	평균 기대수명 이하			평균 기대수명 초과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인원(명)	5,295	6,874	18,126	29,101	7,896
비중(%)	8.0	10.4	27.3	42.4	11.9
기대여명(년)	29.2	20.5	12.8	6.9	-

주 : 2013년 통계청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1.9세임.

■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는 건강과 상봉 시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방위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면상봉의 경우,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특별상봉 등으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50~70대의 이산가족은 분기 혹은 격월 등의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상봉을 실시하면서 점차 확대해나가며, 8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통상적 상봉과는 별도로 단기간 내에 대규모 특별상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이산가족의 가정 대소사(혼인, 사망 등)와 국가명절을 전후한 수시상봉과 함께, 접촉 확대와 동질감 회복 차원에서는 면회소가 아닌 남북한 지역의 상호 방문과 체류기간 연장 등도 필요하다.

둘째, 대면상봉 외에도 생사 확인과 명단교환,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다양한 상봉 방식이 필요하다. 북한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및 명단교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2003년 이후 중단된 당국 차원의 서신교환을 재개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이 상당수임을 고려할 때, 그리고 기상봉지에 대한 재상봉 기회 확대 차원에서도 화상상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위해 선 ‘남북한 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산가족의 생사 여부에 대한 상시 정보교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서신 교환과 관련해서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확대를 위해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서신 교환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대면상봉 없이도 자유롭게 이산가족 간 우편물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화상상봉 재개 및 확대를 위해선 2007년 화상상봉 중단 이전 남북에 설치된 20여개의 화상상봉장을 재개하는 한편, 장비·통신망 등을 점검·지원해야 한다.** 이외에도 생애 상봉 기회를 얻지 못하는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고려하여 영상편지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활성화해야 한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상주 인원 체류 등을 통해 이곳에서 생사확인 등에 대한 상시 정보교환과 정례화 지원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1.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

○ 이산가족 상봉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남북한은 '8.25 고위급 합의'에서 상봉에 합의함

- (단기적 의미)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이산가족의 한을 달랠 뿐 아니라,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
 - 분단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이산가족은 고령이며, 상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필수적이므로 상봉 행사는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임
 - 정부는 8.15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명단 교환을 제안하였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의 첫 단추'로 인식
 -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북한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현대경제연구원, 전문가 설문조사, 2014. 3)¹⁾
- (중장기적 의미) 국민적 통합은 물론,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음
- (여론) 이산가족 상봉은 여야와 보수·진보의 이념을 초월한 민족적·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온 국민이 공감
- 이산가족 상봉은 '8.25 고위급 합의'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단계 실천적 조치로서, 착실한 준비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을 살려나가야 함
 -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9. 7)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상봉의 규모와 정례화 여부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폭을 예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

○ 본 보고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추이와 생존자 추정 등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을 진단하고 대책을 살펴보고자 함²⁾

1) 전문가들은 남한의 최우선 과제로 '5.24 대북 제재 해제'로 지목하였음(이용화·홍순직,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간 실천적 조치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2014. 3).

2) 이 자료는 2014년 2월에 작성한 자료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긴급 대책 필요』 보고서를 최근의 남북관계 상황과 이산가족 상봉 통계를 업데이트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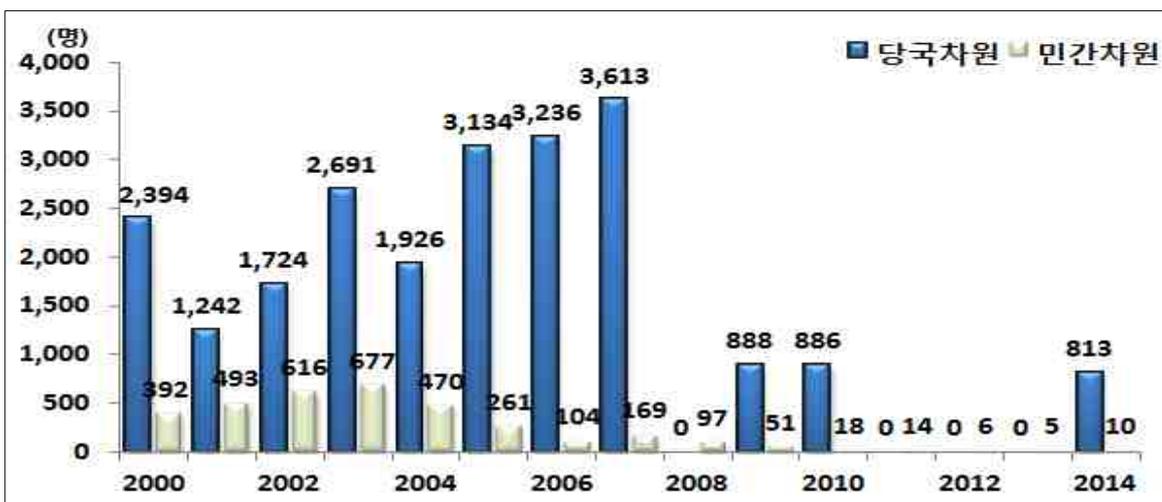
2. 이산가족 상봉 현황과 시급성

1) 이산가족 상봉 현황

○ (상봉 추이) 2000년 당국 차원의 상봉을 계기로 점차 활성화 되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모두 큰 폭으로 감소

-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14년간 모두 19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2만 2,547명(방북+방남+화상 상봉)의 이산가족이 상봉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되어, 해마다 2~3차례의 상봉 행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숫자는 해마다 꾸준한 증가하였음
 - 특히 2005년 도입된 화상 상봉은 2007년까지 총 3,748명의 상봉 기회를 제공하여, 이산가족 상봉 확대에 크게 기여(2005~07년까지 화상 상봉은 전체의 37.5%)
 - 그러나 최근에는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거부 등의 이유로 상봉자 수가 2009년(888명), 2010년(886명), 2014년(813명)의 연간 800~900명 수준에 불과함
-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1990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나, 2008년 이후 급감하는 추세
 -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민간 상봉은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08년 남북관계 경색 이후 두 자리 수로 급감했으며 2014년엔 10명에 그침

< 이산가족 상봉 추이 (2000~20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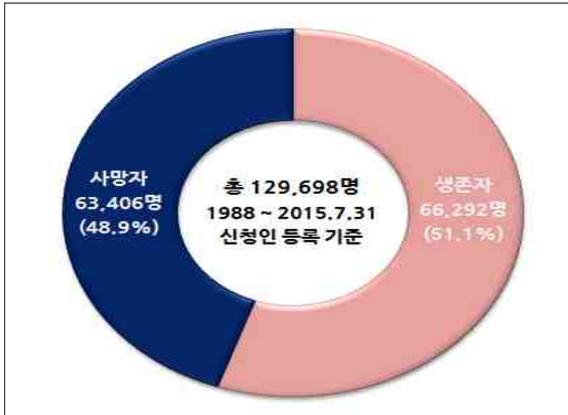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주 : 당국 차원의 상봉자는 화상상봉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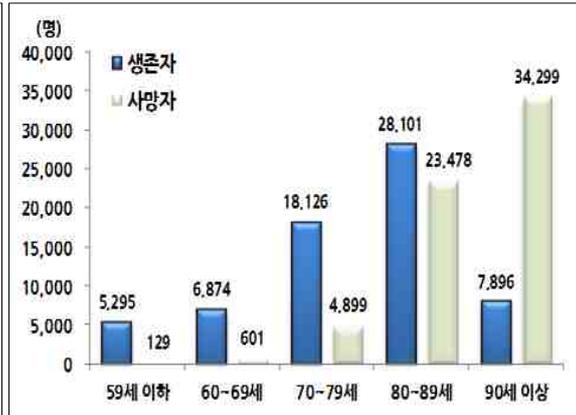
○ (이산가족 등록 현황)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상봉 신청자 가운데 51.1%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88년부터 등록을 시작하여 현재까지(2015년 7월 31일 기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총 12만 9,698명으로, 이중 6만 3,406명(48.9%)이 사망하였고, 6만 6,292명(51.1%)이 생존

< 이산가족 등록자 현황 >



< 연령별 생존자 및 사망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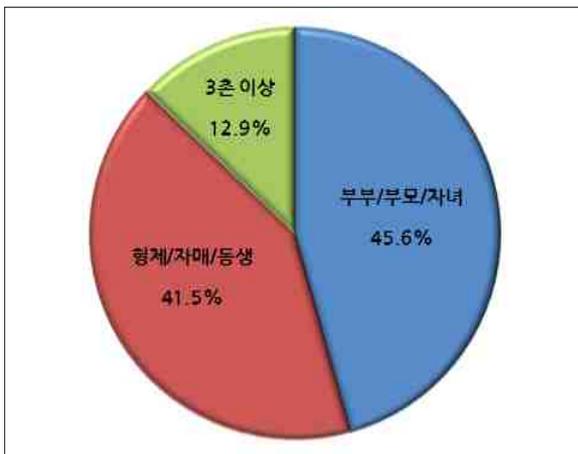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 부부나 부모 혹은 자녀 관계에 있는 상봉 신청자가 4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제나 자매는 약 41.5%, 3촌 이상은 12.9%를 차지함

- 상봉 신청자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황해도 출신이 23.0%로 가장 많았으며, 평안남도(12.7%), 평안북도(7.6%)의 순으로 나타남

< 이산가족 생존자 가족 관계 >



< 이산가족 생존자 출신지역 비율 >

(단위 : 명, %)

구분	인원수	비율
황해도	15,250	23.0
평안남도	8,408	12.7
평안북도	5,003	7.6
함경남도	7,297	11.0
함경북도	2,107	3.2
경기도	2,499	3.8
강원도	1,195	1.8
기타	24,533	36.9
합계	66,292	100.0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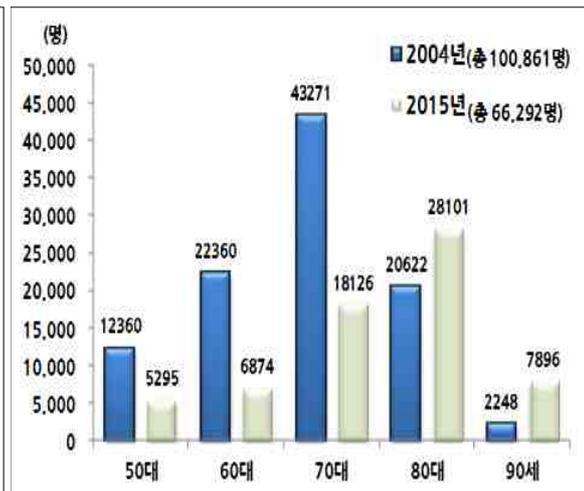
○ (고령층 급속 증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연령 분포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2015년 현재 이산가족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중 전체가 50대 이상이며, 그 가운데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81.6%를 차지함
 - 연령층별로는 80대(42.4%)와 70대(27.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90세 이상도 11.9%에 달함
 - 60대 이하의 비율은 18.4%(50세 이하 8.0% + 60대 10.4%)에 불과함
- 2004년과 비교할 때, 80대 이상의 고령층이 2004년 2만 2,870명(전체 22.7%)에서 2015년 3만 5,997명(54.3%)으로 대폭 증가
 - 70대 이하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2004년 7만 7,991명(77.3%)에서 2014년 3만 295명(45.7%)로 크게 감소
 - 반면 80대 이상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동기간 2만 622명(20.4%)에서 2만 8,101명(42.4%)로 증가
 - 특히 90세 이상의 초고령자 비율이 2,248명(2.2%)에서 7,896명(11.9%)로 증가하여 상봉시한이 한계에 달함

< 이산가족 생존자의 연령별 분포 >



< 이산가족 생존자의 고령화 추이 >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 (사망자 급증)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간 3,800명에 달하며,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연 2,380명에 달함

- 이산가족 사망자의 비율은 증가하나, 상봉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매년 2,38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음
 - 2004년~2014년까지 이산가족 사망자 수가 연간 약 3,800여 명에 이르며, 현재까지의 누적 사망자 비율은 47.3%에 달함
 - 반면에 이산가족 상봉자는 연간 약 1,420여 명에 불과하며, 현재까지의 누적 상봉자 비율은 20.1%에 그침
 - 따라서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매년 약 2,380명 발생
- 특히, 2008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정체된 반면, 사망자 누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08년~2014년까지 이산가족 상봉률은 1.7%p 증가에 불과한 반면, 사망률은 21.0%p 대폭 증가

< 연도별 이산가족 사망자와 상봉 추이 (2003~2014) >

(단위 : 명, %)

연도	사망자 (누계) (A)	생존자 (누계)	합계 (B)	연간 사망자	사망률 (누계)	상봉자		상봉률 (누계)
						연간	누계(C)	
2003	19,488	103,397	122,885	-	15.9	3,368	10,406	8.5
2004	23,058	100,861	123,919	3,570	18.6	2,396	12,802	10.3
2005	26,945	96,268	123,213	3,887	21.9	3,395	16,197	13.1
2006	28,997	94,933	123,930	2,052	23.4	3,341	19,538	15.8
2007	33,300	93,487	126,787	4,303	26.3	3,780	23,318	18.4
2008	38,926	88,417	127,343	5,626	30.6	97	23,415	18.4
2009	42,123	85,905	128,028	3,197	32.9	939	24,354	19.0
2010	43,990	84,133	128,123	1,867	34.3	904	25,258	19.7
2011	49,776	78,892	128,668	5,786	38.7	14	25,272	19.6
2012	53,943	74,836	128,779	4,167	41.9	6	25,278	19.6
2013	57,784	71,480	129,264	3,841	44.7	5	25,283	19.6
2014	61,352	68,264	129,616	3,568	47.3	813	26,096	20.1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계산.

주 : 1) 이산가족의 전체 합계가 변동하는 이유는 미등록자의 등록이 추가로 이뤄지기 때문임.

2) 상봉자수는 당국 차원(화상상봉 포함)과 민간 차원의 상봉자를 합한 수치임.

3) 사망률(누계) = 연도별 사망자 누계(A) ÷ 합계(B) × 100.

4) 상봉률(누계) = 연도별 상봉자 누계(C) ÷ 합계(B) × 100.

○ (생존자 비율 급락) 2015년을 기점으로 생존자 비율이 5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

- 2003년 이후 이산가족의 연평균 생존율이 매년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32년경에는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이 모두 사망할 것으로 예상
 - 현재의 생존율과 상봉률을 기준으로 볼 때 연평균 상봉 비율은 약 1.1%p씩 증가하여 이산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2032년의 누적 상봉률은 42.7%에 불과
 - 따라서, 현재까지의 상봉 규모가 유지될 경우, 57.3%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못한 채 사망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이산가족 생존자 비율이 5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및 확대는 매우 시급
 - 2009년 약 67%의 생존자 비율이 2015년에는 약 50%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 연평균 사망자가 3,800여명임을 감안할 때, 2014년 상봉 규모(당국 차원)인 813명씩 매년 상봉할 경우에는, 연평균 약 3,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하게 됨

< 이산가족 상봉률 및 생존율 추이 >



< 이산가족 상봉률 및 생존율 추정 >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계산.
 주 : 2015년부터는 추정치임.

○ (고령자 기대여명 소진) 현재의 이산가족은 평균 기대여명으로 보아 25년 내에 거의 사망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

- 현재 이산가족은 모두 50~60대 이상으로, 이들의 기대잔여수명이 24.9년임을 감안하면, 이산가족 대부분은 25년 이내에 사망 예상
 - 통계청의 2013년 생명표에 의하면, 세대별 평균 기대여명은 50대가 29.2년, 60대는 20.5년이며, 70대는 12.8년, 80대는 6.9년임
 - 따라서 50~60대의 평균 기대여명은 약 24.9년이며, 70~80대는 9.9년임
- 현재의 모든 생존자들이 향후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봉인원을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10년간 매년 5,500명 이상 상봉해야 함³⁾
 - 50~60대 : 생존자 비율이 18.4%이고 평균 기대여명이 24.9년인 점을 고려하면, 생전에 모두 상봉하기 위해 매년 500명 이상 상봉 필요
 - 70대 이상 : 생존자 비율이 81.6%인 점과 평균 기대여명이 9.9년임을 감안하면, 매년 5,500여 명씩 상봉이 이뤄져야 함
 - 따라서 현재의 상봉 신청자가 모두 생애 한번이라도 이산가족들과 상봉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규모가 최소한 6,000명이 되어야 함
- 특히 평균 기대수명을 초과한 80세 이상의 평균 기대수명 초과자의 경우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기·대규모 상봉 추진이 시급

< 평균 기대수명을 초과한 이산가족 현황 (2015년 현재) >

	평균 기대수명 이하			평균 기대수명 초과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인원(명)	5,295	6,874	18,126	28,101	7,896
비중(%)	8.0	10.4	27.3	42.4	11.9
기대여명(년)	29.2	20.5	12.8	6.9	-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주 : 1) 2013년 통계청 생명표 기준.

2) 세대별 기대여명은 중간치로 함. 예컨대 60대는 65세를 기준.

3) 50대는 (생존자 66,292명 × 50~60대 비율 18.4%) / 24.9년 = 500명, 70대 이상은 (생존자 66,292명 × 70대 이상 고령자 비율 81.6%) / 9.9년 = 5,500명임.

3.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 첫째,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상봉 등 대면 상봉의 기회 확대가 필요

- **상봉의 정례화** : 일회성 상봉이 아니라 분기 혹은 격월 등의 일정한 간격으로 상봉을 정례화 하며, 특히 50~70대 이산가족의 경우 정기 상봉을 기본으로 실시하며 횟수를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추진
- **특별 상봉** : 통상적인 상봉과는 별도로 80대 이상의 평균 기대수명을 초과한 이산가족 상봉을 전제로, 단기간 내 대규모 특별상봉을 추진
 - 2015년을 기점으로 이산가족 생존자 비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특히 90세 이상은 약 7,900명에 달해 상봉 시한이 한계에 달함
- **수시 상봉** : 개별 이산가족의 가정 대소사(혼인, 사망, 생일 등)를 비롯해 남북한 각각 국가명절을 전후해 수시 상봉을 추진
- **상호 방문 상봉** : 주민접촉 확대와 상호 이질감 완화 차원에서 금강산면회소가 아닌 남한과 북한 지역의 상호 방문과 '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가족간 연대감 제고 등을 검토

○ 둘째, 대면 상봉 이외에도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화상상봉 실시, 서신 교환의 상시화 등 다양한 상봉 방식이 필요

- **북한 내 이산가족 생사 확인** : 본격적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북한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 확인 작업과 명단 교환이 선행되어야 함
- **서신 교환의 상시화** : 2003년 이후 중단된 당국 차원의 서신교환을 재개
- **화상 상봉 실시** :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이 상당수임을 고려할 때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대면상봉보다 용이한 화상 상봉을 실시
 - 기 상봉자에 대한 재상봉 기회 확대 차원에서 이들의 화상 상봉도 적극 추진

○ 셋째, '이산가족 상봉의 인프라'를 구축

- 전면적 생사 확인 시스템 구축 : 남북 간 합의를 통해 '남북한 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산가족의 생사 여부에 대한 상시 정보교환 체계를 수립
- 당국 차원의 서신 교환 제도화 :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서신 교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대면 상봉 없이도 자유롭게 이산가족 간 우편물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
 - 과거 서독 정부는 서독 주민들로 하여금 우편을 통한 교류뿐 아니라 인적 왕래를 통한 물품 직접 전달, 면세점 등을 통한 동독 주민에 대한 지원을 허용
- 화상상봉장 재개 및 확대 : 2007년 화상상봉 중단 이전 남북에 설치된 20여개의 화상상봉장을 재개하는 한편, 장비·통신망 등을 점검·지원
 - 북한 이산가족의 경우, 화상상봉을 위해선 평양 고려호텔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이 합의를 통해 화상상봉장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영상편지 사업 확대
 - 생애 상봉 기회를 얻지 못하는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고려하여 영상편지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상시화 : 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를 활성화하여, 이곳에서 생사확인 등의 상시 정보교환과 정례화 지원체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금강산 면회소의 상주 인원 체류가 필요함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이용화 선임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